

75개 기업서 임금체불 174억 적발 75억 즉시 청산, 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부, 상습 체불 사업장 강력 단속
48개 노동청, 98개 기업 대상 실시
14개소 상습체불 사업장 사법처리
건설업 대상 익명제보 앱 연동 확대

고용노동부가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 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5000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 원이 체불된 A기업은 매월 약 20억 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업의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억1300만 원을 체불한 B축협 이사장,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억8500만 원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D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 사업주 용자 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75억 원이 청산됐다. E기업은 광고 감소에 따라 13명에게 4000만원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통해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했다. F제조업체의 경우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지난해 3월부터 1억3100만 원을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받아 재직자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도심출몰 멧돼지, AI 기술로 막는다

국립생물자원관, 인왕산 등 현장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8일부터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과 무인 카메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과 안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전 7시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개나리 등의 관목군락에서 32회 ▲등산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의 경사진 지형에서 8회 확인됐다.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참나무군락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8회 ▲숲 사잇길 ▲능선 ▲생태통로 및 나무계단 하부통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235회 촬영됐다.

특히, 야간 식별(Night Vision) 카

메라로 멧돼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 도심과 가까운 저지대 능선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2회 포착됐고, 사람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수집된 정보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인왕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11m 정도의 큰 수목이 울창한 능선을 따라 이동했다.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의 밀집도가 높은 관목 덩굴 군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개선하고 등산로와 산책로의 경계 표지판 설치에 활용되는 등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한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무인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야생동물 생태 분석과 정보 공개로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의 피해 예방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간편해진다

근로복지공단, 청구서류 간소화 개시

산재근로자의 민영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산재보험급여 증빙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이 향상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2023년 기준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8만2170건, 정보공개청구는 6013건이었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와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15조 규모 중전압 직류배전망 표준화 주도

국표원, IEC총회서 기술위 신설 제안
MVDC 미래 표준화 분야 후속조치

우리나라가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신설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IEC 산하 기술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

배전망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IEC 산하 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건 2011년 기술위원회 119(인쇄전자), 2017년 기술위원회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으로, 수소연료전지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전력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기차 급속충전설비와 AI(인

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직류를 직접 사용하는 미래 수요 증가 대응에 용이하고, 교류 대비 배전 설비 크기 절감 및 전자파 발생이 감소하는 이점도 있다.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총회에서 직류배전망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인프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2024년산 피해 벼 4.6만t 사들여

농식품부, 수매량 전년비 260% ↑

올해 정부가 사들이게 될 피해 벼의 양이 4만 톤(t)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해충(벼멸구, 수발아)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매입

희망 물량은 4만6457t(조곡 기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희망 물량(1만2665t)에 비해 26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 매입을 위한 검사 규격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또 농업인단체, 지

체, 농관원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확정했다. 올해 검사 규격에 따르면 A급(잡정등외)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7%이다. 잡정등외의 B급, 잡정등외의 C급의 경우 각각 67.95%, 55.13%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는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40kg 포대당 2만5000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협력 모색

환경부,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일필드호텔에서 '유엔 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오는 2025년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감축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엔디씨(ND C) 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태 지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및 기후 대응 정책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제출 준비 상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추가 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환경 관련 부처 공직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에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목표가 포함돼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 계획에 자연 기반 해법의 적극적인 통합 및 도입도 요구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신 정책 동향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